



※ 국회 홈페이지(<https://www.assembly.go.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소통마당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달의 입법민원

2022. 4.

국회민원지원센터

[목 차

I. 입법민원 현황	1
II. 입법민원 목록	2
1. 청원	2
2. 서면 진정	2
가. 지방자치단체 결의문	2
나. 각종 단체 건의문	6
III. 주요민원 내용	7
1. 청원 요지서	7
[법제사법위원회]	
●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	7
[정무위원회]	
●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에 관한 청원	8
[교육위원회]	
● (가칭)신길유치원 설립 위치 변경에 관한 청원	9
[보건복지위원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	10

2. 지방자치단체 결의문 요지서 11

[법제사법위원회]

-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문<경기도의회>11

[기획재정위원회]

-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문<경기도의회> ..15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문<전라북도의회> ...17

[교육위원회]

- 학교 무상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대전광역시 동구의회>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문<충청남도의회>22
- 항공우주청 사천시 유치 촉구 결의문<사천시의회>24
-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문<대전광역시의회>26
-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우선협상대상지 재평가 촉구 결의문<함평군의회>28

[외교통일위원회]

- 러시아의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철군 및 우리정부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문<강동구의회>30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제주특별자치도의회>32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문<도봉구의회>34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성북구의회>36
-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규탄 및 철군 촉구 결의문<순천시의회>38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부평구의회>40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41
- 이장·통장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강진구의회>43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강력 촉구 결의안<강진구의회>4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동백섬 해상관광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안<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4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문<대전광역시 서구의회>49
-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문<충청남도의회>52
- 정부는 꿀벌 궤멸과 생태 위기 대책을 수립하라<광주광역시 광진구의회>54
-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문<옥천군의회>56
-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순창군의회>59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문<충청남도의회>61
- 농어업분야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무안군의회>66
-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남원시의회>6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비용 정부지원 촉구 건의문<전라남도의회> ..70
-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강진군의회>72
-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강진군의회>74

- 합리적인 쌀 시장격리 추진 촉구 성명서<서산시의회>76
-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완주군의회>7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촉구 건의문<여수시의회> ..80
-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마련 건의문<보령시의회>82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문<전라북도의회>84

[보건복지위원회]

-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청주시의회>86
-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건의문<익산시의회>88

[환경노동위원회]

-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문<충청남도의회>91
-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예천군의회>93

[국토교통위원회]

-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충청남도의회>95
-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청주시의회>97
-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하남시의회>99

[여성가족위원회]

-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문<대전광역시의회>101

I 입법민원 현황

【청원 접수·처리 현황】

구분	접수	처 리				미처리 (계류)
		철회	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계	
월간	4	-	-	-	-	4
21대 누계	83	-	9	-	9	74

【서면 진정 접수·처리 현황】

구분	접수	위원회		국회사무처		
		진정 회부	참고 자료	자체 답변	이송	불수리
월간	112	0	79	4	4	25
		입법민원47				
21대 누계	3,155	16	2,055	217	188	679

※입법민원 : 지방자치단체 결의문 및 각종 단체 건의문

【인터넷 진정 접수·처리 현황】

구분	접수	위원회		국회사무처		
		진정 회부	참고 자료	자체 답변	이송	불수리
월간	210	2	101	97	3	23
21대 누계	11,598	38	1,313	4,150	160	5,609

II 입법민원 목록

1 청원

번호	건 명	소개의원· 국민동의청원	청원인	접수일	위원회	
					소관위원회	회부일
1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최광현 외 50,000인	2022-4-7	법제사법 위원회	2022-4-7
2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에 관한 청원	이명수의원	강예정	2022-4-20	정 무 위원회	2022-4-21
3	신길유치원 설립 위치 변경에 관한 청원	김윤덕의원	이은주	2022-4-8	교 육 위원회	2022-4-8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	전혜숙의원	박춘식 외 14인	2022-4-29	보건복지	2022-4-29

2 서면 진정(입법민원 47건)

가 지방자치단체 결의문

번호	건 명	접수일	진정인	위원회	회부일
1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문	2022-04-19	경기도의회	법제사법	2022-04-29
2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문	2022-04-19	경기도의회	기획재정	2022-04-29

번호	건 명	접수일	진정인	위원회	회부일
3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문	2022-04-19	전라북도 의회	기획재정	2022-04-19
4	학교 무상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2022-04-1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교육	2022-04-20
5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문	2022-04-13	충청남도 의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2022-04-28
6	항공우주청 사천시 유치 촉구 결의문	2022-04-25	사천시의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2022-04-27
7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문	2022-04-13	대전광역시 의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2022-04-26
8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우선협상대상자 재평가 촉구 결의문	2022-04-04	함평군의회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2022-04-20
9	러시아의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철군 및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문	2022-04-13	강동구의회	외교통일	2022-04-28
1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	2022-04-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외교통일	2022-04-27
1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문	2022-04-13	도봉구의회	외교통일	2022-04-27
1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촉구 결의안	2022-04-13	성북구의회	외교통일	2022-04-25
13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규탄 및 철군 촉구 결의문	2022-04-01	순천시의회	외교통일	2022-04-19
14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	2022-03-31	부평구의회	외교통일	2022-04-04
15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22-04-1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안전	2022-04-27
16	이장·통장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2022-04-01	강진군의회	행정안전	2022-04-19
17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강력 촉구 결의안	2022-04-18	강진군의회	행정안전	2022-04-19

4 ▶▶▶ 이달의 입법민원 「2022. 4.」

번호	건 명	접수일	진정인	위원회	회부일
18	동백성 해상관광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안	2022-04-04	해운대구 의회	문화체육 관광	2022-04-11
19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문	2022-04-1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7
20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문	2022-04-13	충청남도 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7
21	정부는 꿀벌케멸과 생태위기 대책을 수립하라	2022-04-11	광산구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0
22	꿀벌케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문	2022-04-13	옥천군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7
23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	2022-04-13	순창군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7
24	포괄적·점진적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문	2022-04-13	충청남도 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7
25	농어업분야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	2022-04-14	무안군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5
26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022-04-11	남원시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0
2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비용 정부지원 촉구 건의문	2022-04-11	전라남도 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0
28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	2022-04-01	강진군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19
29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2022-04-18	강진군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19
30	합리적인 쌀 시장격리 추진 촉구 성명서	2022-04-18	서산시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19
31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	2022-04-01	완주군의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18
32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 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2022-04-13	여수시의회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2022-04-27

번호	건 명	접수일	진정인	위원회	회부일
33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마련 건의문	2022-04-04	보령시의회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2022-04-20
34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문	2022-03-08	전라북도 의회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2022-04-04
35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2022-04-18	청주시의회	보건복지	2022-04-19
36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문	2022-04-11	익산시의회	보건복지	2022-04-13
37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문	2022-04-13	충청남도 의회	환경노동	2022-04-28
38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	2022-04-04	예산군의회	환경노동	2022-04-20
39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	2022-04-13	충청남도 의회	국토교통	2022-04-27
40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	2022-04-13	청주시의회	국토교통	2022-04-26
41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2022-04-04	하남시의회	국토교통	2022-04-20
42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문	2022-04-13	대전광역시 의회	여성가족	2022-04-26

나 각종 단체 건의문

번호	건 명	접수일	진정인	위원회	회부일
1	국회 청원제도 활성화 방안 제안	2022-03-29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국회운영	2022-04-04
2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설치 건의문	2022-03-28	경남항공 우주기업 대표자일동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2022-04-11
3	육군소속 하남 비행기지 타지역 이전 요청	2022-03-30	고덕숲 아이파크 아파트입주 자대표회의	국방	2022-04-11
4	의원발의(이주환의원 대표발의) '농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협회의견	2022-04-07	한국농수산 물도매시장 법인협회	농림축산 식품해양 수산	2022-04-21
5	요양보호사교육관련 건의사항	2022-04-19	한국요양 보호사 교육원협회	보건복지	2022-04-21

Ⅲ

주요민원 내용

1

청원 요지서

청원요지서

접수일자	2022-04-07	청원번호	2100080
청원인	성명	최광현외 50,000인	
소개의원	국민동의청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명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		
요지	<p>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함.</p>		

청원요지서

접수일자	2022-04-20	청원번호	2100082
청원인	성명	강예정	
소개의원	이명수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건명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보상에 관한 청원		
요지	<p style="text-align: center;">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 구제를 위한 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청함.</p>		

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자	2022-04-08	청 원 번 호	2100081
청 원 인	성 명	이은주	
소 개 의 원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건 명	(가칭)신길유치원 설립 위치 변경에 관한 청원		
요 지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 영등포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가칭)신길유치원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상 위치가 성미유치원과 인접하여 등·하교 시 교통체증에 따른 유아들의 교통 안전문제, 공립과 사립 유치원 간의 위화감 등이 우려되므로 설립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p>		

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자	2022-04-29	청 원 번 호	2100084
청 원 인	성 명	박춘식외 14인	
소 개 의 원	전혜숙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소 관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건 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		
요 지	<p>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이라는 단어의 한계로 인해 구강을 통해 섭취하는 제품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형태의 제품 등을 법제화 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건강기능제품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요청함.</p>		

[법제사법위원회]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문

경기도의회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인권유린의 피해 생존자들이 1심 및 2심재판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이끌어 낸 것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통한 국가안보와 외화벌이의 목적을 위해 기지촌 미군위안부를 국가성장의 주요한 발판으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1957년 <제4차 성병방지대책위원회> 회의의 ‘성매매 여성 집결’ 결정의 일환으로 미군기지가 집중되어있는 지역에 보건사회부 산하 성병진료소 89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3개소를 설치하면서 기지촌 내 성매매 산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협조하였다.

1960년대 이르러서는 「舊윤락행위등방지법」(1961.11.9.)으로 이미 성매매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주도적으로 국내 총 104개소(용산역, 영등포역, 서울역 등 전국 46개 집결지역과 이태원, 동두천, 의정부 등 32개 기지촌 포함)에 있는 특정 윤락지역을 ‘윤락행위의 단속을 면제해 주는 적선지구로 지정’ 하였다.

이후 정부는 본격적으로 기지촌을 ‘정부 주도 외화벌이 사업’ 이라고 칭송하며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애국 교육’ 이라는 정신교육을 시행하였고, 1970년대에는 청와대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기지촌에 가서 여성들을 모아놓고 국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격려하였으며, 1971년 제3공화국은 정부 각 부처 차관이 참

석하는 기지촌 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지촌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외화벌이의 도구이자 안보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명징한 인권유린의 사실 등을 바탕으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2014년 6월 25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2년 7개월 만에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인정하였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하고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지촌 조성·관리를 주도하였으며, 미군군의 성병 예방을 위해 미군위안부의 성병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병증이 확인된 경우 위법적으로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 수감하여 강제적 치료를 강행하는 등 미군의 성노예로 내몰았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2심 판결에서 당시 정부가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가 비록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 국가가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 치료를 시행하며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도모한 점에 대해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적시하였다.

이렇듯 1심과 2심의 재판부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유린된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2018년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판결 이

후 4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대법원 최종 판결이 계류 중인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 또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미동도 없이 모로쇠로 일관하는 현 상황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대법원과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현재의 담보상태에 대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 및 2심의 결과에 이어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신속하게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헌법이 명시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경우, 향후 동종 사건에 대한 판례의 준거로서 효력이 발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에도 강력한 탄력제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그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5.19.)를 제정하고 정부에게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행보는 도민의 바람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있는 지방정부의 본래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을 밝힘으로써 인권유린의 과거사에 대한 범사회적인 반성 및 성찰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 명시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책무에 관한 시민적 숙의 및 합의의 장을 견인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여전히 계류 중인 대법원의 재판 지연과 국회의 입법 지연에 대한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최종 판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 회복과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2. 3. 31.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기획재정위원회]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도로시설에 대해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를 한다는 것은 도로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당한 규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도 형식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세 없다는 의미를 넘어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로시설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의 부과 여부가 정해진다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초기의 투자 비용을 정해진 기간동안 회수하고,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구조로 인해 한국도로공사 등이 운영하는 도로시설에 비해 단위 거리당 평균 통행료를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게 부담시키는 것은 도로의 이용이 생계활동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에 있는 도로이용자 입장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민자사업 초기의 대규모 자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를 개정한 당시인 1999년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 비춰볼 때 개정취지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도로 이용자

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에 이르면서까지 이용자에게 통행료 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도로 시설이 공공재라는 것을 감안 한다면 정부의 불공정한 ‘세수불리기’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지극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세금은 면제해 주면서 민자도로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자도로 이용자들이 민자도로의 이용을 기피하고 줄어든 통행량으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손실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히 경기도가 도로 관리청인 민자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손실대로 보상해 주면서 부가가치세가 국세인 탓에 통행료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정부에 빼앗기는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22. 3. 31.

경 기 도 의 회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건의문

수도권 중심의 국가성장정책의 폐해를 막고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전문컨설팅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적 지원과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와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3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지역발전 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여전히 운영의 효율성과 실적을 내세우며 지역발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결국으로는 지역상생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생산물 우선구매율과 공사·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이용률은 미흡하고, 지역인재 채용의 경우 아직도 의무채용 예외조항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탓에 2022년도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목표인원은 73명에 불과하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이러한 성과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선 이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역과의 상생 및 협력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소재한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혁신을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혁신기관 및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혁신도시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상생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형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지역상생과 관련하여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채용 및 육성, 지역주민지원,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모든 기관에 배점을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차관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경영평가단에 혁신도시 전문가를 위촉하라.

2022년 3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교육위원회]

학교 무상급식 표준단가 마련 및 급식비 국비지원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제도는 취학, 학교설치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教育權)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력을 신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행되어 온 학교 무상급식은 지난 10년간 우리 아이들이 눈칫밥 먹지 않고 당당하게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비율을 줄여주어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기여해 왔으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자 의무교육의 완성에 기여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0 국공사립학교 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비율이 2015년 27.98%에서 2019년 16.82%로 5년간 11.16%가 줄어들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근 5년 사이에 학부모의 한 해 부담비용이 179만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급식제도의 원활한 운영의 이면에는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수반

되어 왔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은 전액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구비는 무상급식비 지원 16억3천만 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2억6천만원을 합쳐 19억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전체 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7억 4천만원에 비해 8.8%가량 증가된 것으로 구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무상급식비 지원금은 매년 무상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함께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간 급식비의 단가가 서로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학생들은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위한 무상급식을 운영하는데 지역별로 차별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중학교 급식단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이 5,688원 경기도가 4,652원 대전이 4,000원, 전북은 3,500원으로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써, 헌법 정신에 따라 최소한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액 국비 부담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방비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지 10여 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예산부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학생들은 지역별로 차별을 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계속하여 열악해질 것이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무상급식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썩도 차별 없고 안정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범위 및 급식 표준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급식 단가를 마련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2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충남 핵발전소(SMR) 건설 반대 촉구 건의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온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핵발전소(SMR) 건설”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당진지역을 꼭 짚은 이번 발언은 결코 당진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충남 석탄화력 발전소 지역을 망라한 망언이기에 충남 도민은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충남은 전력자립도 226%가 넘는 지역이며, 지역에서 쓰는 전기보다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안락한 전기사용을 위해 충남도민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배출가스와 미세먼지 그리고 초고압 송전철탑 등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다.

더 이상 수도권의 안락한 생활,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여 만든 전기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충남도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는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부지의 활용방안과 지역의 미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은 지방자치에 역행함을 물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전환의 모든 과정은 도민과 함께 해야 한다.

석탄화력 폐쇄 이후 충남도의 미래는 충남 도민이 결정 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다.

주 교수와 같은 핵발전 옹호론자들의 말대로 SMR이 소규모라 전력망 연결도 쉽고 분산형 전원으로 알맞고 안전하면서 왜 굳이 멀고 먼 충남에 지어 송전 손실을 감내하고 송전탑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

핵발전소는 향후 충남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이다.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면 충남도민들은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핵발전소(SMR) 건설 발원 규탄을 촉구하기 위해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한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핵발전소(SMR) 충남건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하나.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원칙부터 세워라!

2022. 3. 29.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항공우주청 사천시 유치 촉구 결의문

항공우주청 사천시 유치 공약 실천을 촉구합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항공우주청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7대 항공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민간이 주역이 되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항공우주산업의 민간주도 성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2022년 3월 3일 삼천포대교공원 유세에서 "우리나라 항공우주의 중심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바와 같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는 경남 사천시입니다.

사천시는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산업 집적지로서 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 인프라는 다른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AI는 국내 최대규모의 우주센터 인

프라를 구축하고 누리호 체계 총조립 및 아리랑 1호부터 7호까지 다목적 실용위성 제작, 발사체사업 등 국내 유일 우주산업 앵커기업으로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등 사천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중심도시입니다.

민간주도의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산업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이 항공우주시대 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시 유치공약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4. 15.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문

과학과 국방의 영역이었던 우주는 이제 그 영역을 산업분야로 확장하면서 민간이 주도로 한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총 16개국이 우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를 앞다퉀 준비하고 있다.

누리호 발사 실험을 통해 우리나라도 전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되었지만, 우주 분야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기 위해서는 우주청의 신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집중적인 투자와 유기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하기에 윤석열 당선자의 ‘경남 지역 항공우주청 신설 공약’은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중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항공우주는 크게 우주항공(Aerospace)분야와 수송항공(Aviation)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우주항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송항공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NASA와 같은 우주항공분야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았을 때, R&D 위주의 우주개발이 중심을 이루어야 하고 그 결과가 산업발전으로 연계되도록 협업이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우주청 입지는 전문적 우주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및 핵심 R&D 기관 등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현장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인 산·학·연·관 인프라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최적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핵심 R&D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에 우주청을 설립하여 연구개발과 산업혁신의 허브로 조성하고, 우주산업 관련 생산시설 등 생산 특화 인프라가 구축된 경남을 우주산업의 제조 허브로 조성한다면 지역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올바른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의회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설되는 우주청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우주 관련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최적 입지 대전에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청(廳)단위 행정기관은 대전으로의 집결’이라는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기조의 확립을 위해 우주청의 대전 입지를 촉구한다.

하나, 이제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냉철한 사고를 회복하고, 백년대계 우주산업의 육성과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 선도를 위해 최적 입지 대전에 우주청을 신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2. 3. 30.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우선협상대상지 재평가 촉구 결의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한빛원전으로부터 30km 근방에 국비 100억(부지 12억 별도)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건립하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의 우선협상 대상으로 전북 부안군 줄포면을 선정했다.

한빛권 방역방재센터는 평상시에 방재훈련교육을 수행하다가 한빛원전 사고 시 사고 수습과 주민대피 등 현장대응을 총괄하며, 영광군 군서면에 소재한 방재센터가 기능상실 될 경우 신속히 한빛권 광역방재센터로 이동해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빛권 광역방재센터는 원전사고 시 지휘본부 판단의 촌각을 다투는 일로 전남도민과 함평군민의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순간임을 고려해 영광군 군서 방재센터와 더 가까운 전남도가 추천한 함평군 해보면에 위치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한빛원전이 전남 영광에 위치하고 원전반경 30km 이내에 6개 군중 4개 군(영광·무안·장성·함평)이 전남에 위치하며, 전남도와 함평군 등 유관기관 지원 용이성 및 접근성 측면에서도 함평군 해보면이 유리한 위치이다.

더군다나 원전사고 시 주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광역방재센터의 부지선정은 주민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평가 기준은 특정항목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또한, 원전사고에 대비한 대피장소인 군민들의 지정 구호소가 정반대인 방향에 광역방재센터를 두는 것은 전남도민과 함평군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며, 부지매입 등 예산과 건립 편의성만을 우선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이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함평군민의 안전과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한빛권 광역방재센터의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남도민과 함평군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예비후보지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예비후보지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수혜자가 함평인 만큼 평가위원을 재선정하라.

2022년 4월 6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외교통일위원회]

러시아의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철군 및 우리정부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문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을 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유엔 조사 후 발표되었다. 전쟁 시작 후 3월 16일까지 어린이 52명을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가 726명으로 발표되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한다. 강대국들의 이권으로 인한 힘겨루기에 큰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도 독립된 자주국가가 되기까지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컸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외면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을 알고도 모른 채 넘길 수 없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묵과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하여 지난 3월 2일 유엔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41개국의 찬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3월 17일에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강동구민을 대표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며, 우리정부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의 평화 및 민간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동구의회는 러시아가 유엔총회의 결의안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동구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존중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어야 함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강동구의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한다.

2022. 3. 2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일방적인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주요지역에 미사일 공격과 공습을 시작하였다. 최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에만 공격을 한다고 밝혔으나, 민간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자행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간인 사망자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 총동원령으로 맞서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당해낼 수는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비극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상자와 전쟁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 사용은 답이 될 수 없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철수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비극적 전쟁을 유발한 러시아에 그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무고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력 침공을 규탄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러시아의 즉시 철군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어떠한 형태의 무력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든 군대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 유엔 등 관련 정부 및 기구와 함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강한 연대를 보내며,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 이자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무력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의 즉시 철군 및 우크라이나 국민의 평화·안정·인권을 지지한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적인 무력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국제사회의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한다.

2022. 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문

전쟁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지난 2월 21일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가 승인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 지역 보호를 명목으로 2월 24일 무력 침공을 자행한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등 민간 시설까지 파괴하였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민간인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이 각종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주요 시설만 공격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이며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존 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든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을 위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이다.

주권 국가의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는 여성, 청년, 아이들과 같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며, 이를 희생하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러시아는 즉각 침공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여 우크라이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노력에 참여할 것을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제사회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민들이 전쟁의 참혹하고도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벗어 나갈 간절히 염원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크라이나의 평화 정착, 인권보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의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22. 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행위 규탄 및 국제 평화정착 노력 촉구 결의안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일대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해 현재까지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참담한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침략행위임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적반하장 격으로 외국이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군사충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으로 방사능 유출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침공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주변국들의 침략과 남북전쟁의 역사를 겪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정착을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 규탄하며, 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군대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 세계적 위기상황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범세계적 과제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규탄 및 철군 촉구 결의문

최근 러시아는 평화를 지지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의 희망을 외면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으로 침공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자민족이 다수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자행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무력 침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국가 간의 갈등에서 외교적 노력을 외면하고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 러시아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단기간 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우크라이나 군대와 국민의 결사항전으로,

상황은 극적 반전되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결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모습, 민병대에 자원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려는 사람들, 조국을 구하고자 귀국하는 사람들, 이 모습에 감동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토 동맹국, EU 공동체, UN 및 문화체육분야의 국제기구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과 규탄을 표명하며,

동시에 국제기구에서도 탈퇴, 배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무고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고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며, 이런 행위에 대한 비극적 결과는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사전에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공격이 가져온 죽음과 파괴의 책임은 오직 러시아에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비극적 전쟁을 유발한 러시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비인륜적 전쟁 중지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순천시의회는 러시아의 명분 없는 공격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을 강력히 지지하고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

하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군병력 철수를 촉구한다.

하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무력 침공과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반인륜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와 피난민 및 국제사회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 중단과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군, 조선인민군, 중국 인민지원군 간에 체결한 정전협정 이후, 약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은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도록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희망의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여전히 불신과 대결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부평구의회는 동북아시아 평화의 시작점인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평구의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평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평구의회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재구성된 지방의회를 필두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부활되었고, 자치분권이 가속화면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복잡화되는 한편, 이를 견제 및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관 분립형 구조에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마땅하나, 현행 지방정부는 강 집행부 - 약 의회형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는 체제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조직편성권은 지방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 독립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먼저 지방의회에는 사무국 내 조직, 정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사무기구는 4급(국장급) - 6급(팀장급)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사무국 내 5급(과장급) 간부공무원 정원(※ 전문위원 제외)을 확충함으로써 집행부와 대등한 행정조직 체계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조직 관리·운영을 기해야 함은 물론, 추후 우려되는 기관 내부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별도의 과 신설을 거치지 않고서는 과장급을 배치할 수 없는 현행 법령 상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국회에는 「국회법」

이 있지만,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단지 「지방자치법」에서 다루어지고 있기에,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기틀이 다져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하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2. 3. 3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이장·통장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는 현재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통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와 재난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주민의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강진군의 경우 이장 정원은 293명으로, 평균연령은 62.6세이며 최고령 이장은 83세로 이장들의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 마을의 다양한 주민 요구 수렴 및 민원 해결과 더불어 사회복지 관련 공무 대행 업무 등 여러 방면에서 지역의 봉사자로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이장·통장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해 사기 저하와 최일선 행정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많은 전국 지방의회의 이장·통장 처우개선 현실화 건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은 공식적으로 이장수당 월 30만 원과 상여금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 원에 불과한 보수 지급에 그치고 있어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 보상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한 실정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닥친 농·산·어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장·통장들에게 행정기관과 주민 간 의사소통의 역할 증진 및 주민 서비스 향상 기여를 위해 실비변상으로서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라!

하나, 국가적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업무 등 최일선 실무자의 임무를 수행한 이장·통장들에게는 기본수당과는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소멸 위기의 농·산·어촌 지역 이장·통장들의 권익 신장과 사기 양양을 위해 이장 기본수당을 반드시 상향 조정하라!

하나, 21대 국회는 상임위 심사 중인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2022. 3. 4.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는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 19상황에서 지역별 맞춤형 방역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 역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방의회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이나 권한 등이 취약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견고하지 못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 존재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커졌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핵심내용인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독자적인 세출 예산권이 포함돼 있지 않아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구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지 못한 미흡한 점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보완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 향상과 지방의원의 역할과 권한이 정립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이 현실화 되는 초석을 닦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국가 경쟁력이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는 곧 시민권한 강화이다. 올바른 지방자치 의미와 한국 미래 성장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강진군의회에서는 전 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조직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2. 3. 4.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백섬 해상관광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안

부산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등을 통해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가감 없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어 5년 동안 한국 관광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동북아 해양 수도로서의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려는 이러한 큰 흐름 속에는 우리 부산이 가진 천혜 자원이, 우리 해운대구가 자랑하는 천혜의 해양 자원이 그 바탕에 있어 왔다. 해운대를 명명하신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 동백섬과 해운대해수욕장의 너른 백사장 모두 자연과 공감하는 주민의 생활 터전으로서 긴 시간을 함께 지켜온 것이다.

지난 2016년 이기대 공원과 해운대 동백유원지를 연결하는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 제안서가 부산시에 제출되었으나, 교통대책 미흡, 시·중점부 친환경 방안 제시 미흡, 공공 기여 방안 미흡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다. 이후로도 교통 체증 악화, 자연 경관 및 조망권 침해, 환경 파괴, 인근 주민의 사생활 침해, 문화재 훼손, 관광 콘텐츠 중첩으로 인한 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1년 5월 11일, 5년 만에 수정 제안이 다시 제출되었다.

사업자 측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대, 경관 조화를 고려한 안정성 제고, 공적 기여 부분의 강화 등 여러 보강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기에 현 세대의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과거 역사적 의의를 지닌 공공재의 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에 심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는지 스스로 자구해보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는 해운대-이기대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에 주민수용성 확보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 2016년도 결의안에 이어 해당 사업의 종단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이기대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즉각 종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이기대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 진행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해당 사업의 종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 4.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문

지난 겨울 이후 양봉농가는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90%까지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들었고, 꿀벌들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의 피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년 1, 2월 두 달간 전국 9개 도, 34개 시·군 99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양봉협회와 월동벌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꿀벌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기후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사의 원인인 응애류는 발육 번데기에 기생하였고, 말벌류는 벌통 출입구에서 일벌을 포획해 막대한 피해를 준 것입니다. 또한, 9~10월 저온현상은 꿀벌의 발육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11~12월의 고온현상은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하게 한 것입니다.

벌꿀 흉년으로 양봉농가의 경영 여건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은 계속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올 봄 크게 화두로 떠오른 꿀벌의 개체 수 감소는 과일·채소류 생산은 물론 사료 작물 등의 번식과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국내 식량 농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농업인만의 생존권이 아닌, 전 국민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자연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을 시행하고,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의 사육 규모는 등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시설·기자재 등 양봉장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밀원 식물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양봉농가에게 양봉산업을 지속하기에 정부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 서구의 양봉농가는 2021년 12월 기준 기성동을 주축으로 20농가 2,369군이 있으며, 작년 한 해 양봉산업에 필요한 화분·사료(설탕) 구입 지원과 개량벌통 등 지원으로 7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시형 양봉농가는 농촌보다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조사업 지원금이 매년 부족한 상태였으나, 올해는 채취할 꿀벌이 사라지다 보니 농가들이 신청을 포기한 상태이고, 이는 전국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들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이는 양봉산업을 접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전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꿀벌 개체 수 감소로 양봉을 포기한 농가를 조사하여 양봉산업을 이어가도록 피해자금 지원 등 보상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꿀벌 질병 방제를 위한 약제를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 피해 농가의 양봉산업 지속을 위한 봄벌 증식과 구입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 선진 사육 기술과 질병 방제 관련 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꿀벌 소멸에 대한 문제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농업 자체가 파멸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양봉농가를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2. 3. 3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농어업 강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그 결과 농어가 인구감소 및 지역간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농어촌지역 공동화 및 인구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음.

관련통계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2000년도 403만명에서 225만명으로 감소하고, 도시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농어가 소득 비중도 2000년도 80.5%에서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기준, 1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부터는 각 45만원씩 지급하며, 지급 수단도 지역상품권로 한정하여 농어가 소득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본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됨에 따라 각 지 자체별로 지원대상, 금액 등이 서로달라 지역간 형성평 문제 및 광역시 단위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민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고 사라져 가는 농어업·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제21대 국회에서도 농어민수당 관련 법안 6개가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확보하고 침체 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함.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즉시 지원하라!

2022. 3. 29.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정부는 꿀벌 궤멸과 생태 위기 대책을 수립하라

최근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작년부터 제주,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꿀벌 궤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개체 수로는 70억 마리, 금전적으로 1,000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이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현재 꿀벌이 사라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으며,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천적인 말벌의 공격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다면 사체가 남아있겠지만 벌통 안이나 주변에 흔적조차 없는 것도 미스터리로 꼽힙니다.

이에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식량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꽃가루받이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작물의 70%가량도 꿀벌 덕에 열매를 맺지만, 꿀벌이 사라지면서 작황 부진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식량 생산과 수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처럼 문제는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양봉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서 과일, 채소류 생산은 물론 사료작물 등의 번식과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방치하면 국내 식량 농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여 농업 기반 붕괴가 식량안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토대가 무너지면 인류 생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지구온난화 못지않게 인류에게 위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그로부터 4년 정도밖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듯이 이처럼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리 광산구의 회 의원 일동은 정부 및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피해 농가의 양봉업 지속을 위한 봉벌 증식과 구입자금을 지원하라!

하나. 꿀벌 질병 방제를 위한 약제를 신속히 지원하라!

하나. 전국적인 꿀벌 궤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라!

하나. 이상기후와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 사육 기술과 질병 방제 관련 연구를 추진하라!

2022년 4월 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

꿀벌궤멸과 생태위기 대책수립 촉구 건의문

최근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작년부터 제주, 경남, 전남 등 남부지역에서 시작된 꿀벌궤멸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개체 수로 70억 마리, 금전적으로 1,000억 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꿀벌이 사라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천적인 말벌의 공격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됐다면 사체가 남아있겠지만 벌통 안이나 주변에 흔적조차 없는 것도 미스터리로 꼽힙니다.

이에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FAO 즉,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00대 식량 작물 가운데 71%가 꿀벌의 꽃가루받이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 농작물의 70% 가량도 꿀벌 덕에 열매를 맺지만 꿀벌이 사라지면서 작황 부진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식량 생산과 수급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처럼 문제는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양봉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서 과일, 채소류 생산은 물론 사료작물 등의 번식과 생장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방치하면 국내 식량농업에 큰 차질이 발생하면서 농업기반 붕괴가 식량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의 토대가 무너지면 인류 생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는 것이 지구온난화 못지않게 인류에게 위협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달라지는 식물 분포도 벌의 생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시나무는 서양종 벌의 주요 꿀 채집원이지만 온난화에 취약해 잎이 노랗게 변해 말라 죽는 황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0년 17만5천여 ha였던 아까시나무 식재 면적은 2007년 절반 이하인 약6만여ha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그로부터 4년 정도밖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듯이 이처럼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및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피해농가의 양봉업 지속을 위한 봄벌 증식 및 밀원수 식재를 지원하라.

하나, 꿀벌 질병방제를 위한 약제를 신속히 지원하라.

하나, 전국적인 꿀벌체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상기후와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선진 사육기술과 질병방제 관련 연구를 추진하라.

2022. 3. 31.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시장격리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미곡 생산량의 변화가 빠르게 집계되지 않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1년간 농사를 지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미곡 생산량이 초과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미곡 가격이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일정폭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시장을 격리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은 시장격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매년 초 양곡수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을 통해 사전에 현 물가 등을 기준으로 기준생산량과 미곡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놓고, 수확기에 기준량이나 그 수준을 초과해 미곡 가격의 하락이 예상 될 때 자동으로 시장을 격리해 미곡 생산 농가의 수입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가 마음 놓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일 것이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에 제16조에 따른 양곡시장 격리제를 자동시장격리제로 변경해 미곡농가의 수입을 보존하라!

하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매년 초 기준생산량 및 가격을 정하여 기준에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 즉시 양곡시장이 자동격리 될 수 있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2022. 3. 28.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문

한국 농업에 “농산물시장 개방”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친 요소가 또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 아래,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였고, 그때마다 빗장 풀린 농산물시장을 바라보는 농심은 새까말게 타들어 갔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에 따른 전면적 시장개방과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은 숨돌릴 틈 없이 한국 농업을 뒤흔든 농업 협상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돌파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넘어섰던 한국 농업에는 시장개방이란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1978년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개방농정이 주요 기조가 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란 희소식은 농업계엔 비보로 돌아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커지자 국제수지 적자를 근거로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가트(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국제수지(BOP) 조항을 졸업하라는 수출국의 요구가 거세진 것입니다.

자유화의 속도를 우리 뜻대로 조절하는게 아니라 국제적 요구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1980년대 세계적인 농산물 공급 과잉으로 수출국들에게 농산물시장을 개방해 수요를 늘리는 한편 국내 보조를 철폐해 무역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1993년 모든 농산물의 수입 규제를 관세화하는 원칙과 국내 보조와 수출 보조에 대해서도 삭감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를 통해 개방되었습니다.

UR은 한국 농업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1995년 농산물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국가간 상호배타적으로 관세 감축을 단행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적 조류를 형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국들은 경제성장으로 다양한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던, 우리나라 시장을 활짝 열게 하였고, 정부는 공산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였으나, 2007년 타결된 한·미 FTA의 충격이 컸고,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발효해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는 국가끼리 관세를 철폐하고 공통의 무역규범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메가(초대형) FTA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양자 FTA에선 관세 추가 인하에 따른 값싼 외국산 농산물의 공습이 문제였다면, 메가 FTA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담고 있어, 농업계에 미칠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2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발효되는 가운데, 지난 12월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도 가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CPTPP에 합류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어 농촌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발효된 CPTPP는 2019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무역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관세 철폐율은 95.6%에 달해 회원국간 농산물 관세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2021년 2월에는 영국, 9월에는 중국·대만, 12월에는 에콰도르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FTA보다 복잡한 공식이 적용되는 메가 FTA의 통과 의례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TPP에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까다로운 협상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테면 한·칠레 FTA 타결 당시 개방 수준을 확정하지 못한 고추 등의 관세 철폐 문제가 재점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회원국에 제시할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은 한·중 FTA보다 훨씬 높을 것이며, 우리도 중국산 농축산물의 관세 축소·철폐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특정 지역·농장에서 병해충·가축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수입은 허용할 수 있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의 ‘구획화’도 걱정거리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파고가 밀려오는 메가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FTA 피해보전 제도” 를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농업인들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농가당 농업소득이 연평균 1,000만원대에 정체돼 있는 등 농가의 경영사정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요 국가와 FTA를 체결할 때 국내 보완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수·축산 경쟁력 제고와 직접 피해 보전 등 농가에 실익을 준 제도 상당수가 일몰됐거나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 주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인구 소멸 등으로 농업인들의 생존권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위기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이나 대안도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생존을 위한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메가 FTA 시대’ 에 적응하기 위하여 ‘폐업지원제’ 를 시장개방 대응 구조조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품목별 지원’ 에서 ‘농가별 지원’ 으로 제도를 개편하라.

- 하나. 정부는 메가 FTA 시대에 농촌의 생존권을 위하여 ‘피해보전제도’ 를 더욱 보완·강화하고, 2025년에 일몰예정인 직불제를 조속히 연장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농업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제도의 조속한 정비와 농업의 기술개발·보급에 앞장서라.

2022. 3. 29.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농어업분야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촉구 건의안

장기화 되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농수축산물의 소비위축은 물론 판로단절 그리고 영농인력 부족, 작황 부진 등 농어업인의 피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형평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직접 방역 대상에 포함되어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이들에게 농산물을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농어업분야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막판에 농어민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소규모 영세 농가에게만 선별 지원하는데 그쳐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농어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어민들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인력부족으로 인건비가 2배 가까이 치솟아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쌀값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올해 처음 도입한 쌀 시장격리는 작년 쌀 생산량이 388만 톤으로 예상 수요량 362만 톤보다 26만 톤가량 더 많이 생산되어 시장격리 발동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정부의 늦은 시장격리와 최저가 입찰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농촌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선별 지원대상은 전체 농가 인구의 20%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영업제한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가 되지 않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농어민들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농업과 농촌은 민족역사의 근간인 동시에 생명산업으로써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보존의 공익적 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발전의 근원으로 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농촌소멸의 위기에 기후변화와 전염병까지 더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의 피해 현실을 직시하고 영농 규모별, 농산물 품목별로 나누어 혼란만 가중 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이 아닌 폭넓은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농어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2년 3월 15일

무 안 군 의 회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0년 5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공익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하여 기존 직불제에서 지적된 특정 작물 편중, 영농 규모에 따른 편차, 타작물재배 농업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고, 농업·농촌 및 농업인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여 사람·환경 중심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쌀과 밭작물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 실시하여 농업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전언하였다.

하지만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농업 외의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되는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주소가 도시지역(동지역)인 농민들은 소농직불금에서 배제되어 면적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 바, 소농직불금에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로 직불금 수령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생겨 도시지역 거주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따라 급격하게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도농복합중소도시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촌 지역’의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외 농촌지역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과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수령액이 낮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들이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가에 배제되어 억울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엄격한 자격요건 및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농업인의 현실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한국의 장래 농업 발전을 좌우할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인구감소로 위기에 놓인 도농복합중소도시의 「농촌지역」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공익직불금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농촌현장의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직불제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공익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투기 방지와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이용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 !

2022년 4월 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비용 정부지원 촉 구 건 의 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가을부터 현재까지 전국 7개 시도, 45건이 발생했다. 예년 이맘때 쯤이면 수그러들 시점인데도 최근 다시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농가에서는 여전히 방역 고삐를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은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2014~2015년, 2016~2017년, 2017~2018년, 2020~2021년 등으로 발생 시점은 더 빨라지고 상시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여건이 계속되자 가금류가 몰려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및 시행령 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살처분 및 이동제한에 따른 보상금’ 수준이다. 그 외 ‘사체 및 오염물 소각과 매몰’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화 및 친환경 사체 처리로 그 처리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예방적 살처분 해당지역이 1km이내 원칙으로 확대됨에 따라 결국 지자체 비용 부담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0~2021년도에는 97농가, 3백 8십 1만수 살처분과 오염물건 등 폐기로 전국 630억 원(전남 113억 원)의 지자체 비용 부담이 발생했고, 2021~2022년 현재까지 전국 67억 원(전남 16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입장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공익수당 등 해마다 부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만 있는 상황에서, 가금 농가가 몰려 있는 지자체에서는 살처분 부담까지 모두 떠안으니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비용은 이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비용의 지원)을 개정하여 살처분과 사체의 소각 및 매몰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금농가의 방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축사마당 포장, 전실 소독시설, 외부 울타리 등 방역시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인프라 총 사업비도 올해 69억 원에서 140억 원까지 늘려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비용 정부 지원 및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확대를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떠넘긴 살처분 처리 비용을 지원하라.

하나.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라.

2022년 3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

지금 농어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학교가 사라지고, 문방구가 사라지고, 버스가 사라졌다.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다.

1993년 농산물 시장 개방 협정 이전에 도농간 소득 격차는 약 90%(도시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이었으나, 2000년엔 80.5%, 2010년 66.8%, 2019년 61.8%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들은 인구밀도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비혼과 만혼, 출산율의 급락을 초래하고 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도시도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고, 농사 규모 2.0ha 미만의 농가는 생산한 농산물로 얻는 농업소득으로는 1년 생활에 필요한 가계비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

기후 위기, 먹을거리 위기, 지역소멸 위기 시대에 농림어업은 단순히 먹을거리 생산만이 아니라 식량안보, 국토·환경 보전, 대기 정화,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일자리 유지와 창출은 물론, 인성 함양, 보건 휴양공간, 전통 역사문화의 보전과 지역경제사회의 유지와 활성화 등 다원적 기능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즉, 농어촌은 인류 생존의 심장이고 가깝게는 환경의 위기 앞에 자연과 환경을 지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탄소 흡수원이자 재생에너지의 보고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166조 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농민의 농업활동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는 그동안 국가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외면당해 왔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농어촌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의 소멸을 극복하고, 농어촌을 살리는 것은 농어촌 주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의 핵심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개발사업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국토·환경·문화지역 지킴이로서 기본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민에게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의 인구 과밀화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비수도권 및 도시도 함께 살아나게하는 마중물이며,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에 강진군의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은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하라.

하나, 농민들에게 농산어촌 국토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적 가치 생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하나, 빈사 상태의 농어촌 재생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주민들의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3. 4.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20년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그로 인해 우려되는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쌀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제’를 시행했지만, 농민에게 혼란과 불신만 심어주었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유 없이 시행을 미루고 농민 스스로 쌀값을 포기하게 만드는 최저가 입찰로 인해 계획했던 20만 톤에 못 미치는 14만 5천 톤이 시중보다 낮은 평균 63,763(조곡 40kg)원에 낙찰되고, 5만 5천 톤이 대규모 유찰되는 등 쌀값 안정을 염원하던 농민들의 바람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당국의 쌀 시장격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게 격리 시기를 지연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초과 생산량 통계가 발표되었음에도 정부는 12월 28일에 시장격리를 확정하였으며 다시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입찰을 하였다.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확기 평균가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이는 양곡관리법상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또는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정부가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시기를 늦췄기 때문이다.

둘째, 쌀 가격을 물가관리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 것이 문제이다. 최저가 입찰은 정부가 정해 놓은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가를 써내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농가부터 낙찰된다. 이 방식은 쌀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시장격리제도와는 맞지 않으며 우려의 목소리에도 뜻을 굽히지 않던 정부가 오히려 스스로 쌀값 하락을 유도한 꼴이 된 것이다.

최저가 입찰은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 증가로 어려워진 농가의 한숨을 깊게 하고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면서 농민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터무니없이 낮은 예정가격으로 대규모 유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시장격리 발동 시기를 의무화하지 않아 정부의 의지에만 맡기고 저가 순으로 물량을 사들이는 현 시장격리 제도는 쌀값 지지라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또 기후 변화와 전염병 창궐로 식량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영농의지를 꺾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주권과 국민의 식량 보장을 약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쌀 시장격리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아래의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요건이 성립되면 의무적으로 지체 없이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철회하고 공공비축미 방식으로 매입하라.

하나, 이번에 유찰된 5만 5천 톤과 추가격리 예정인 7만 톤 전량에 대해 신속히 적정 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하라.

2022. 3. 4.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합리적인 쌀 시장격리 추진 촉구 성명서

얼마 전 정부는 2021년산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차 20만 톤의 시장격리 계획에 못 미치는 145,280톤이 평균 63,763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다. 총 40만 톤이 넘는 물량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낮은 입찰예정가격 때문에 대규모 유찰사태를 빚고 말았다.

오랜 영원이었던 쌀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시장격리 입찰에 참여한 농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보고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시장격리제도는 2020년 변동직불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그런데 시장격리제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긴 결과를 낳은 것이다.

문제는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이라는 방식에 있다.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입찰 예정가격 이하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기 때문에 쌀값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쌀 시장격리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수확기 가격이 곧 농가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격리는 이미 쌀값이 떨어진 후에야 진행되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제도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의도와 다르게 잘 못된 결과를 낳았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서산시의회는 연간 10만 톤의 쌀을 생산하며 쌀 생산량 전국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의 논 농업과 농민들을 지키고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을 버리고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게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채택하라.

하나. 정부는 유찰된 5만 5천 톤과 추가 격리 예정인 7만 톤의 쌀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추후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면 지체 없이 격리를 시행하라.

2022년 2월 24일

서 산 시 의 회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문

현행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시장격리조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시장격리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부의 시장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양곡가격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미곡 생산량의 변화가 빠르게 집계되지 않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1년간 농사를 지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미곡 생산량이 초과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미곡 가격이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과잉 생산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일정폭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시장을 격리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농가들은 시장격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매년 초 양곡수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을 통해 사전에 현 물가 등을 기준으로 기준생산량과 미곡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놓고, 수확기에 기준량이나 그 수준을 초과해 미곡 가격의 하락이 예상 될 때 자동으로 시장을 격리해 미곡 생산 농가의 수입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가 마음 놓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일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에 제16조에 따른 양곡시장 격리제를 자동시장격리제로 변경해 미곡농가의 수입을 보존하라!

하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매년 초 기준생산량 및 가격을 정하여 기준에 초과되거나 미달될 경우 즉시 양곡시장이 자동격리 될 수 있는 양곡시장 자동 격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2022. 3 . 11.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국가산업단지는 한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67년부터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로서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환경·안전 사고로 인해 여수시민과 지역사회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난 2017년 12건, 2018년 13건, 2019년 7건, 2020년 8건, 지난해 24건 등 118건에 달한다. 이 기간 노동자 32명이 목숨을 잃고 8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최근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형 폭발과 화재로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했고 지난 2월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또 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각종 석유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 밀집된 여수국가산단은 시설 노후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이 사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고 때마다 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끊이지 않는 참사와 사상자 숫자가 말하듯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단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증축 지원, 국가산단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야 한다.

자본의 끝이 없는 이윤추구와 국가의 무책임에 기인한 노동현장의 참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진정성과 책임성이 있다면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중단하고 국가산단 안전관리시스템의 대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 위험의 외주화 등 노후 국가산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환경친화적이며 노동존중의 정의로운 전환이 지켜지는 국가산단을 만들고 국가산단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권한과 역할 확대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차원에서 친환경적이고 노동존중을 실현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되도록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2022. 3. 24.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마련 건의문

우리나라의 전기발전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과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127.8GW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력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석탄 하역 등의 용이성 등으로 충남 보령시, 당진시,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 경남 고성군 등 대부분 지방의 해안권에 위치하고 있다.

2019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화력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의 중심이며, 국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미세먼지 과다 발생과 더불어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주민들은 고압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재 기설치된 가공 배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처리 기준은 승인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및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미승인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도권 및 인근 지자체로 공급하기 위한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과밀하게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지중화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다.

지중화 사업의 중요한 문제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의회는 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지중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송전선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송전탑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화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송전선로는 의무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라.

2022년 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문

청정수소산업 육성 정책기반 마련과 수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회가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법 일부개정법률안¹⁾은 청정수소의 보급이 촉진될 수 있는 청정수소 사용 의무와 청정수소 정의 등을 골자로 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번이나, 야당의 발목잡기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청정수소의 범위를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인 ‘그린 수소’로 정의해야 한다는 여당과 원전을 활용한 수소도 청정수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 대립이 국가 핵심사업의 촉매제가 될 수소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의 기조 아래, 전북을 비롯한 지자체와 기업이 수소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정수소의 정의조차 정해지지 않아 수소 산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소법 개정안에 담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는 수소연료전지 구매를 활발히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곧 국내 수소연료전지 생산 기술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욱, 해당 개정안은 우리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열쇠이기에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가적·지역적 현안이다.

1) 의안번호 2110504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수소 발전 산업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던 국내산 연료전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고, 우리를 제외한 세계의 기술력은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2년 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 통과는 해를 넘기고 있어, 탄소중립을 지지하고 수소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와 기업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투자 심리마저 위축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국가와 전북의 수소산업 발전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공급, 구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2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건복지위원회]

영업시간제한 완화 촉구 건의문

2019년 11월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2021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수의 선진국들이 방역에 실패해 수 많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할 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K-방역”을 완성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일 최고 확진자수를 갱신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파력에 비해 위중증 치명률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백신 접종률 등을 참고해 자가격리 지침의 변경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만큼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2년이 넘게 이어지는 영업시간제한으로 늘어가는 빚과 공과금 체납액, 폐업을 하는 사업주와 일터를 잃은 직원들, 임대인의 피해 등 정부의 방침을 따른 대가는 혹독하기만 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민생과 내수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제한 규제 철회는 방역의 포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률적 강제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일상으로의 회복과

정이며, 이미 K-방역을 완성한 바 있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증명하고 있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청주시 내 영업시간제한 12개 업종에 대한 피해보상 대상은 최소 약 1만 3천 5백 개소 입니다.

이는 피해보상대상을 집계한 숫자로, 실제 자영업자 등의 숫자는 몇 배를 웃돌 것입니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계 고용이 살아나야 지역상권 소비가 살고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조속한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폐”를 포함한 방역지침의 개편과 함께 손실구제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022. 2. 25.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외국인 아동 보육 차별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평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도주의적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에게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 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12년 3월에 처음 시행된 누리과정은 만 3 ~ 5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관리를 통합해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 아동과 외국인 아동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보육과정에서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헌법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주의와 인도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국인 주민 수는 215만명으로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25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자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은 누리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녀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들도 보편적 보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주민의 아동들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

2022. 3. 30.

익 산 시 의 회

[환경노동위원회]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문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부유하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μ m(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미세먼지의 입자는 10 μ m보다 작은 먼지 입자를, 초미세먼지는 2.5 μ m보다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합니다.

보통 사람 머리카락의 직경이 50 μ m~70 μ m로 머리카락의 굵기와 비교하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1/5~1/7 정도의 크기이고, 초미세먼지는 1/20~1/30의 크기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사람의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더욱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아 흡입 시 폐포를 통해 혈관까지 직접 침투하여 호흡기질환, 폐질환은 물론 뇌질환,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비롯해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태양광·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100조 원 투입 등의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를 공식화하면서 매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희생을 방관만 할 뿐, 정작 미세먼지의 진원지로 꼽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한 '2019 중국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페트코크(Petroleum Cokes) 수입량이 세계 1위이고 이에 따라 알루미늄 공장과

시멘트 공장의 페트코크(Petroleum Cokes) 소각으로 초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2019년 8월에 실시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용역 최종보고’ 를 통해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70%는 중국발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는 중국 방향에서 100%로 유입되어 대기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9일 대기질 모니터링 사이트 IQAir(아이큐에어)에 따르면 공기질이 나쁜 전 세계 10곳의 도시 가운데 서울과 인천이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하였고, 10위권 내 도시 2곳 이상이 뽑힌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1위는 중국 선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질소산화물 외에 이산화황, 염화수소, 사이안화수소 등 각종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미세먼지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더 독해진다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에 자국의 요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충남도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가 대기오염 및 건강위험 등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중국 자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항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국민을 대표해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하라.

하나,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라.

2022. 3. 29.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청정지역 예천군 보문면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모 기업의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다.

예로부터 예천은 낙동강과 소백산 자락에 있는 산자수려한 지역으로 군민들은 언제나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청정자연을 보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모 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내성천이 가까이에 있고 주민 400여 세대, 700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인 논밭이 산재해 있어 군민들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한 침출수, 유해가스, 분진의 발생은 주거환경 악화, 농산물 및 지가하락, 이주 예상, 농공단지 식음료 업체의 피해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청정한 예천군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예천군 보문면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모 기업은 보문면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관계기관은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건설로 인해 예천군민의 건강권, 생존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30일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

[국토교통위원회]

균형발전 저해 정책 지양 및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건의문

헌법은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 (제120조 제2항),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제122조),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 (제123조 제2항) 등에서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전국적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균형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높은 인구밀도로 야기되는 주택, 도로, 교통, 환경, 교육, 상하수도 등의 문제 그리고 수도권의 과도한 경제집중으로 인한 지방과의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수도권 지역을 질서 있게 정비하여 수도권 내의 지역간에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였던 것이 2020년 급기야 50.2%를 돌파했습니다. 당초 동서간 지역격차 해소를 제기되었던 균형발전 과제는 어느덧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1.7%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고, GDP와 일자리 50%가량이 창출되는 현실에서 생산잠재력의 분산 없이 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생산잠재력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 수도권 입주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지원, 지역인재 할당제 및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시군의 4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우리도의 경우 16개 시군 중 10개 시군 (67%)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어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공멸의 길로 들어서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과 법률의 제·개정을 차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60년 지속된 불균형발전 추세를 단기간에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이 추세를 반전시켜야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220만 충남도민과 충남도의회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과 법률 제·개정을 차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라!

하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충남 혁신도시 완성하라!

2022. 3. 29.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방안 개선 촉구 건의문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 과 ‘민간임대주택’ 으로 구분되며, 우리 시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임대주택이 2만6천여 세대가 공급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1만5천 세대 이상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근래 분양전환을 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살펴보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기금과 각종 세금감면이라는 특혜를 받고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그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이윤만 추구하려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5년 임대주택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으로 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분양 전환 및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한 근거조차 없어 임대사업자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임차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현실화하며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및 분양가 산정에 대한 산정 기준마련을 촉구한다.

2022. 3. 31.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로 여겨졌지만, 임대 사업자는 공공의 택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그 근본적인 목적보다는 사업자의 이윤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은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와 10년인 경우로 구분되며,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산정하고,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임대주택은 인근 주택의 시세와 함께 공급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매년 주택가격이 치솟고 있는 우리 시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10년 후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하고, 자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감당하기 버거운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결국에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얻는 막대한 수익에 반해 주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정부와 하남시의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공택지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성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하남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하기를 촉구한다.

2022. 4. 6.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문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의 장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과 여성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2021), 성별임금 격차는 31.5%(2020)로 OECD 최하위이다.

지금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더 강화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강제 등으로 다각적인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정책을 집행하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왔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전진시켜 왔다. 2019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총생산(GDP)은 14.4%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전 세계 97개국에는 여성 혹은 성평등 전담 장관급 부서가 있으며, OECD 38개국 중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장관급 성평등 부서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성평등의 가치는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필수적인 가치이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부서 설치 20여 년 만에 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는 명백한 퇴행이다.

성평등과 관련하여 더욱 실효성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등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부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기능별 부서로의 재배치는 과거로의 회귀이고 퇴행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성불평등과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될 것이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가정에선 이중노동과 돌봄의 부담을 더욱 크게 짊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성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여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만연해있으며, 여성들이 체감하는 폭력에 대한 위험은 매우 깊은 수준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지난 시대의 여성들보다 분명 더 나아졌다. 그것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해온 정부와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남성들의 노력 덕분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우리의 미래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존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의 강화 및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22. 3. 30.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이달의 입법민원

전자게시: 2022년 4월

발행처: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02-6788-2154, 2453, Fax.02-6788-3346)

※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입법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시행내규」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소통마당 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